

중소 근로자 85% “결혼·출산·육아, 대기업보다 어렵다”

중기중앙회·저고위, 정책 간담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 공동 모색

육아제도 못 쓰는 직장문화 1순위
복지 격차·대체인력 부담도 원인
김 회장 “저출생, 미래의 핵심 과제”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10명 중 8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재직자보다 결혼·출산·육아가 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에 비해 출산·육아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중소기업 근로자 10명 중 6명은 결혼을 고민중이거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 계획에 대한선 질문이 없었다고 답한 가운데 ‘고민 중’이라는 답변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7명이 자녀 계획에 대해 유보적인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기중앙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함께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맞아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소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를 전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회장,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니스 회장, 김택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회

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한국여성리더연합 소속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임직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기문 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꼭 풀어야 할 숙제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면서 “저고위가 9월부터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돼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근로자 300명,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00명 등 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보다 결혼·출산·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4.6%에 그쳤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출산·육아 제도 활용이 어려운 직장 문화’ (63.5%)가 1순위로 꼽힌 가운데 ▲복지 수준 차이(49%) ▲대체 인력 채용 어려움 등 동료·사업주 부담 비중(46.7%)도 적지 않았다.

‘결혼 의향’에 대한선 ‘있다’는 답변이 42.9%로 절반에 못미치는 가운데 ‘고민 중’은 29.9%, ‘없다’는 27.2%였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부담되는 요인’은 ▲주거비 등 비용 부담(57%) ▲가사 등 결혼 후 역할 부담(52.7%) ▲소득·고용불안(35%) 등을 꼽았다.

‘자녀 계획’에 대한선 절반이 넘는 51%가 ‘없다’, 25.7%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낳겠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연구원은 “출

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선 경제적 지원 확대와 함께 실제 근로·영업 환경에 맞는 돌봄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며 “특히 제조업 고대근무, 소상공인의 야간·주말 영업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문 결과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복수응답)으로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47.7%) ▲어린이집 등 돌봄 인프라 확대(35.7%)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32.7%) 등을 꼽았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기업 여건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가족이 있는 삶을 위해선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모두의 창업’ 해킹 파장... 5000명 영입비밀 보호 지원

중기부 “피해구제·재발 방지 총력”
TF 중기부 단위 격상... 1차관 팀장
사이버안보팀 꾸려 산하기관 종합 점검

모두의 창업 플랫폼 정보 유출로 복병을 만난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 선정자 5000명 전원에게 무상으로 영입비밀 원본증명을 지원한다. 영입비밀 원본증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향후 분쟁 발생시 영입비밀의 존재, 보유자 및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태스크포스(TF)’를 기존 창업국에서 중기부 단위로 격상해 1차관이 TF팀장을 맡는다. 특히 TF에는 정보화담당관이 관장하는 사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본관에서 ‘모두의 창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버안보팀을 별도로 꾸려 이번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향후 중기부 산하 공

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피해를 우려하는 도전자분들을 최우선으로 해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철저한 조사까지 총력을 다해 점검·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성숙 중기부 장관 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준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합격자 정보 유출과 관련해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가 열린 후 연결된 이메일, 200자 이내의 아이디어 요약본, 그리고 심사평이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

노 차관은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있는 자처럼 암호화된 정보를 가져간 만큼 현재로서는 이를 ‘해킹’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모두의 창업 합격자 최대 5000명의 일부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고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세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식품 소공인 제조혁신 박차
스마트 해썹 구축 연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협업해 ‘2026년 소공인 부처협업형 스마트제조·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오는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22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식품·축산물 소공인의 제조공정 개선과 스마트 해썹 등록을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스마트 제조장비 도입을 통해 제조현장의 데이터 수집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 해썹 등록과 연계해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식품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중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로서 스마트 해썹 최초 등록 또는 추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이다.

/김승호 기자

광주·대구·대전·울산 ‘창업도시’ 육성 박차 CJ대한통운, 물류현장 AI 안전관제 확대

중기부, 지역 창업기업 278곳 선발
기업당 최대 4억 사업화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광주, 대구, 대전, 울산을 혁신 인제가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창업 도시’로 키운다. 이들 지역에서 창업기업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고 우수 창업기업의 지역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총 278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4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다음달 7일까지 ‘2026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창업기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업도시’는 지역내 자원과 정부의 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방에서 창업이 성장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모집 대상은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와 ‘지역창업패키지’로,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는 투자유치 이력이 있는 초기 도약 단계 기업을 돕고 지역창업패키지는

지역내 창업기업의 성장 및 이전을 각각 지원한다. 지역별로 광주 73개사, 대구 74개사, 대전 74개사, 울산 57개사를 각각 선발한다. 특히 278개사 중 100개사는 기존 중앙 주도 선발이 아닌 지방정부가 자율 선정 방식으로 뽑는다. 자율선정 방식을 제외한 공모선정 방식은 ‘K-스타트업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며 총 178개사를 선발한다.

창업도시로 이전을 원하는 희망기업도 지원한다. 선정된 지역 이전 기업에게는 지방정부가 자부담금의 10%를 별도 제공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신규 창업도시 6곳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0위권 내 창업도시 5곳을 육성하고 비수도권도 함께 성장하는 다핵형 창업생태계로 전환을 꾀한다.

/김승호 기자

전국 57개 사업장 실시간 모니터링
CCTV·바디캠으로 이상징후 감지

CJ대한통운이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제 체계를 통해 물류현장 안전 사고를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환경·보건·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자동관제 사업장을 57개로 확대하고 AI CCTV 적용 거점을 늘리는 등 전국 물류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22일 밝혔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먼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AICCTV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22개 사업장에 설치한 AI CCTV는 작업자의 움직임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쓰러짐, 장시간 움직임 없음 등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EHS 상황실



CJ대한통운 EHS 상황실에서 근무자들이 CCTV를 살펴보고 있다.

/CJ대한통운

에 알림을 통해 전달한다.

CJ대한통운은 AI CCTV의 성능 고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물류현장의 작업 동선과 설비 환경, 작업 형태 등 다양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위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현장 안전관리자가 착용하는 바디캠을 전 사업장에 적용했다.

/김승호 기자

여기중

여성창업 전주기 지원

공공형 창업기획자로 도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기중)가 여성 창업 시작부터 도약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공공형 여성 창업기획자’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여기중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AC) 등록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중은 그동안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와 전국 18개 창업보육센터(BI) 운영을 통해 유망 여성 창업가 발굴·육성에 앞장서 왔다. 직접 투자 기능까지 갖추며 명실상부한 ‘여성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 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포부다. 핵심 추진 전략은 성공한 선배 여성 기업인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는 ‘여성창업펀드’ 조성 및 이를 통한 ‘상시 투자 연계’다.

/김승호 기자